

# 미투와 ‘더불어’ 추락하는 與, 아직은 ‘자유’로운 野

안희정 이어 민병두 추가 폭로 與, 2차 피해 방지 등 대책 마련 野 “진위 밝혀 국민에 사과해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의혹에 이어 지난 10일 민병두 의원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폭로가 이어지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현재까지 미투 폭로가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인사들에 집중되고 있으며, 당 차기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던 안 전 지사와 현역의원으로는 첫 사례로 민 의원이 폭로됨으로써 더불어민주당이 난감해하면서 동시에 추가 폭로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11일 당 관계자는 “‘미투’ 운동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는 와중에 민주당 소속 인사들이 가해자로 줄줄이 폭로되고 있어 상당히 당황스럽기는 하다”며 “이러한 상황이 지방선거나 향후 국정 운영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당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하지만 현재의 ‘미투’ 운동은 계속되어야 한다는데 공감대



여비서 성폭행 의혹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9일 오후 마포구 서울서부지검으로 출석해 고개를 숙이고 있다. /연합뉴스



자신을 겨냥한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폭로가 나오자 1시간여 만에 즉각 의원직에서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사무실 문이 11일 굳게 닫혀 있다. /연합뉴스

를 이루고 있고, 2차 피해 방지 등 대책 마련에 여당인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설명했다.

반면,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야당들은 민주당을 향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는 분위기가 관측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미투 운동 확산으로 민주당은 추문당으로까지 변명의 여지 없이 되었으니 탄핵후 지난 1년 동안 그들이 한 것이라곤 정치보복, 국정파탄, 성추문 이외에 세상을 변하게 한 것이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 집권세력 전체가 성농단으로 국민적 심판대에 오르게 되었다”며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과 추미에 대표의 민주당을 ‘추문당’으로 부른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차기 대권주자라는 현직 지사의 권력형 성폭력으로 시작해, ‘대통령의 입’이자 문재인 정권의 얼굴이라는 사람의 불륜행각 의혹, 현직의원과 군수의 성추행, 이만하면 청와대에서 국회 광역단체 기초단체에 이르는 ‘위 아래 위! 위! 아래’ 까지 ‘성추문 종합선물세트 정당’이라 할 만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외치던 민주당 정권이 집권 10개월만에 ‘성추행 교본’이나 만들어 내며 ‘이중성과 위선, 거짓말로 가득찬 대한민국’으로 추락시켰다”며 “결과 속이 그토록 다른 이중적 ‘추문당’이 무슨 엄치로 국정농단을 운운하고 적폐청산과 여성인권을 입에 담을 수 있는지 창피할 따름”이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권성주 대변인도 전날 논평에서 “그렇게 도덕과 인권을 내세웠던 정부·여당의 잇따른 성폭력 문제를 보며 그 추잡한 이중성에 분노를 금할 수 없

다”며 “정부·여당은 정상적인 인성을 만들기 위한 당내 성교육부터 진행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권 대변인은 “민 의원은 한 건의 폭로가 있자마자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며 “국민이 당혹스러운 만큼 빠른 현직 국회의원의 사퇴는 드러난 문제가 빙산의 일각이었을 것이라는 강한 의혹을 낳는다”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정치권에 미투 운동이 확산되면서 집권여당인 민주당 인사들이 연루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사건의 진위를 분명히 또 명확히 밝히고 국민들께 사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안희정, 정봉주, 안병호 함평군수 등에 이어서 급기야 현역 의원까지 사퇴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며 “사실관계는 차후에 밝혀지겠지만 서울시장 출마 예정자로 거론됐던 민병두 의원 사건은 또 한 번의 충격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집권여당에 대해 신뢰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모든 성범죄에는 성역이 없어야 한다. 여야 정치권은 스스로를 경계하고 자가당착에 빠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창원 기자 mediaeco@metroseoul.co.kr

## 정부 개헌안 내일 文 대통령에 보고... 여야 공방 불가피

與, 자유한국·바른미래와 회동 제안 ‘3+3+3 체널’ 구축 방안 제시할 듯 자유한국, 동시개헌투표 ‘절대불가’

오는 13일 정부개헌안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식 보고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개헌 논의에 전환점을 맞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지방선거시 동시 개헌 국민투표’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개헌안 발의가 향후 여야의 협상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3월까지 국회가 개헌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정부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개헌안을 보고받은 후



지난 7일 낮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오찬 회동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인사말 도중 ‘개헌’과 관련한 발언을 하자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주제에 벗어난다’며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까지 발의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여야5당 대표 회동에서도 “개헌은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국회에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회가 개헌을

적시에 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쪽에서도 그냥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것이 아니냐”고 밝혔다.

이같은 문 대통령의 개헌 드라이브에 여야는 예의주시하며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당장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우원식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등과의 회동을 제안했다.

이 자리에서 우 원내대표는 국회 차원 개헌 합의안 도출을 위한 ‘3+3+3 체널’ 구축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정부개헌안을 제시하며 개헌 논의의 불씨를 다시금 살린 만큼 이 기회를 통해 야당을 압박해 국회 협상안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야당의 반발에 부딪혀 개헌 투표가 불발되더라도 개헌안 마련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임으로써 정당성을 부여받겠다는 계산도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자유한국당의 경우 지방선거시 동시 개헌 국민투표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116개의 의석을 보유해 개헌 저지선(국회의원 1/3, 293석 기준 98석)을 넘겨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개헌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다만 문 대통령이 정부개헌안을 발의할 경우 이를 반대하기 위해서는 10월 개헌 투표 시기 확정 등 약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무작정 반대만 했을 경우 이번 지방선거에서나 향후 정국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기 확정 정도의 협상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과 개헌 내용 중 권력구조를 두고 크게 이견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를 관찰시키기 위해서라도 시기 확정 등을 통한 명분 확보가 중요할 것이라는게 정치권 다수의 해석이다. /이창원 기자

## 더불어민주 박수현 ‘내연녀 공천’에 정면 반박

“이혼시 수백억대 특혜 강요 거절 조작 기자회견으로 허위사실 유포”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남도지사 예비후보인 박수현 청와대 전 대변인이 자신을 둘러싼 ‘내연녀 공천’ 의혹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박 예비후보는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와대 대변인 재직 시절 부인과 이혼 협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백억대의 특혜를 주도해 강요받았지만 거절했다”며 “이후 충남지사 예비선거에 등록하자 특혜를 요구했던 장본인들이 기획 조작된 기자회견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저의 개인신상과 관련

해 악성적 내용들로 충남도민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여러분께 진심 송구하다”며 “이 같은 정치공작은 후보에 대한 저열한 네거티브일 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선명성을 훼손하는 명백한 해당행위로 중앙당 차원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대변인 재직 시 민주당 당원인 오영환씨, 전 부인 박모씨, 전 처형 등으로부터 부정청탁이 있었으며, 이를 거절하자 보복성 정치공작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박 예비후보의 설명이다.

박 예비후보에 따르면 이들은 ▲전기차·가스차 충전소를 위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서울시 토지 1500평 20년간 무상임대 및 사업 인허가 ▲성남구 분당 주유소 매입자금 150억원·서울 강남구 대치동

주유소 매입자금 500억원 연 4% 이자 대출 은행 앞선 등 사업권을 구체적으로 요구했다.

박 예비후보는 “이들은 ‘청와대 대변인 말 한마디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제 전 보좌관을 압박했지만, 요구를 들어줄 힘도 없었다”며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이들은 제가 불륜을 벌여 아내가 집을 나갔다는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벌였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불륜 상대로 지목된 김모씨와의 불륜설에 대해서도 김모씨의 전 남편의 진술서와 박 예비후보의 전 처가 제출한 소송 서류 등을 제시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 예비후보의 전 처의 이혼소송 서류에는 이혼이 ‘여자문제’가 아닌 ‘생활고’ 때문인 것으로 적시돼 있었다. /이창원 기자

## 강남 아파트 가격 ‘거품’ 강북 ‘거품 과정’

보험연구원, 2년전부터 지방과 격차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가격이 거품이 끼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북지역의 경우 가격 거품이 형성되는 과정에 놓였다고 분석했다. 보험연구원 윤성훈 선임연구위원과 한성원 연구원이 11일 발표한 ‘서울 아파트매매가격의 거품 가능성’에 따르면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로 침체를 보였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2014년부터 상승세로 전환했다. 지난 2016년부터는 지방과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KB 부동산 시세 기준 서울 전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 2013년 -1.9%에서 2014년 1.0%, 2015년 5.6%, 2016년 4.2%, 2017년 5.3% 상승했다. 이 기간 소비재물가지수 상승률은 연평균 1% 내외

에 그쳤다. 강남구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 2013년 -1.2%에서 2014년 2.3%, 2015년 6.9%, 2016년 5.3%, 2017년 6.6% 상승하는 등 상승세가 서울 다른 지역보다 높은 모습을 보였다.

반면 부산·대구·광주·인천·대전·울산 등 6대 광역시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 2013년 1.5%, 2014년 3.3%, 2015년 6.6%, 2016년 1.1%, 2017년 0.9% 상승했다. 2016년부터 서울과 상승률 격차를 보였다.

윤성훈 선임연구위원은 “정부는 지난해 8월 2일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부동산 대책(8·2 대책)을 발표했다”며 “다만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더욱 높아짐에 따라 과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봉준 기자 bj35sea@